

# “2·4공급대책 재점검… 주거혁신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계층별 맞춤 주거지원 확대  
중형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개선  
문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당부

국토교통부가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4공급대책을 재점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전하며 올해 업무 계획을 전했다.

업무보고 주제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이다.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 ◆2·4공급대책 점검…주거지원 확대

국토부는 먼저 주거 혁신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도시권에 83만6000가구(서울 32만가구, 수도권 6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을 상반기 중 재정립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밖에 고령자를 위해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육아특화설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주거복지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방 중소도시 개발 강화

지역 간 상생 개발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고,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거세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선도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일상 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에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토 균형 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하면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 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정연우·최영훈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규제유연화 조치 재연장 검토… 금융지원 정상화 방안 마련”

## 금감원 업무보고

가계·기업 부채 등 불안요인 대응  
포용금융 확대에 양극화 완화 모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규제유연화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절벽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불안전판매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장

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 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을 강화토록 하며, 금융지주사 내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감독한다.

다음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서는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안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처한다.

또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화상통화 및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모집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다.

증시에서는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

포용금융은 더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은행 점포폐쇄에 대해서는 시장규율을 강화하며,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해 연체우려 차주는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검사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 지원자격 : - 신입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장소득보장)

▶ 담당업무 :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 지원접수처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디프라이벌링 23층 신한 용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보지 않았는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레드과 숙종가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위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교통학성, 대학생 2차내 학자금(연44)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직급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명칭: 업계최고 고소득발생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물어봐도 좋습니다

4.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고고대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연정 (문자환영)  
010-3043-3574

## 시작부터 뼈격대는 서울역 쪽방촌 개발 “정부, 사전협의·의견수렴 없이 계획 발표”

후암특계1구역 준비위 전면취소 입장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이 민간주도의 개발을 원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전면 취소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사전 동의 없

이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토지·건물주에 대한 이주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추진위원회 회원 가운데 민간주택 입주권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며 “토지·건물주를 포함해 구역 내 주민들 대부분이 현금 청산을 원하지 않는다. 후암1구역 내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자동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건물주는 전체 10%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됐던 동자동 일대는 지난해 5월 지구단위도시계획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등의 새로운 용역수주에 의거해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주들은 모든 개별개발행위를 중지하고 2021년 연말에 발표되기로 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일대 4만7000㎡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천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연우 기자